데스크 시각

이곳 저곳 표밭만 갈면, 민심이 떠난다

채 희 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완화', '금지', 또는 '해제'한다는 정책들이 자고나면 쏟아진다. 메가시티라는 국가 프로젝트부터 종이컵 사용·개고기 식용 금지 등 일상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안들이 연일 여·야 정책으로 발표되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휘발성 높은 이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국가 기본정책의 변경 등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크고 작은 정책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몇 가지가 있다. 메가 서울, 주식 공매도 금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백지화 등은 국민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당혹스럽게하는 것 들인데, 그 공통된 특징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수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만 가중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이 이슈를 선점하자, 야당과 정치권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다급해진 여당측이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정책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센 것만을 놓고 보면 얼핏 야당의 주장이 맞는 듯 보인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슈들은 정책 시행시 혜택을 보는 유권자 수가 절대적인 규모라는 점에서, 욕 먹을 결심과 표 계산을 마친 여당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라"고 각료와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시작은 여당이 맨 먼저 발표한 김포의 서울 편입이었다. 이어 주식 공매도 금지와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 등이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메가 서울'의 본질은 지금보다 서울 면적을 넓히고, 인구를 더 늘려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집권 여당의 구상이 우리나라를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켜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책을 펴, 60년 가까이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유지됐다. 서울만의 경쟁력 강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소멸, 국가 경쟁력 추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의 민심을 반전시킬 카드로 내놓은 메가 서울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정부의 주식 공매도 금지는 '뜬금포'에 가깝다. 금융위기시 시장이 불안정할 때 공매도 중지로 시장을 안정시킨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이제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한국만 공매도 금지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400만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 처벌을 넘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부자 감세라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 1400만 개미의 표심이 총선의 꿀단지임에 틀림 없어 보인다.

선심성 정책들 되레 감표 요인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 단계에 이른 '카페내 일회용컵 금지'를 백지화한 것은 전 지구적 환경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둔 탓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시행을 불과 보름 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업소 주인들은 물론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회용품을 자제해왔는데 돌연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너무나 군색한 변명이다. 역시 총선을 앞두고 8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살핀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총 유권자가 44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800만 명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일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중시한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여·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득표를 위한 것인지, 유권자는 구별할 줄 안다. 정치인들만 그 사실을 매번 잊을 뿐이다.

은펜칼럼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박 홍 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순천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끝난 '2023순천만정원박람회'의 성공과 그 원인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순천의 성공 스토리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힘이 느껴진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장, 공무원, 시민'의 삼합(三合)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의 지혜와 비전과 집념, 공무원의 전문가 수준의 전문성과 열정과 협업, 시민의 참여와 합의와 인내심이 이루어 낸 결과로 보인다.

'주식회사 장성군'이 연상된다. 1995년부터 시작된 장성군의 변화는 전국적인 이슈였다. 당시 김흥식 장성군수는 행정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무, 자신의 기업체 경영 등 특이한 경력이 있었기에 공무원과 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19세기 법과 제도 속에서, 20세기 마인드로, 21세기를 살아간다면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다. 사람이 변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단체장은 오너가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최고경영자이며,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임직원이며, 시민들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할 수 있는 물과 같은 주주이다. 두 지역을 보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를 생각해 본다.

첫째, 단체장은 전문경영인으로 광주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작은 조직부터 거대 기업까지 리더의 방향 설정과 능력에 따라 그 조직이 달라진다. 전문경영인의 능력과 철학,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육지 속 섬이 되어 경쟁력이 약해지는 ㈜광주광역시 현실을 꿰뚫어 보고 묘책을 주주에게 공시해야 한다.

둘째, 사업은 타이밍이다. 기업인은 예민하다. 한 번의 결정이 기업 생존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의 결정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 주주 이익과 기업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 일부 반대나, 준비 부족으로 주춤거리다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셋째, '경험'이 아닌 '증명'이다. 결과로 감동을 줘야 한다. 고객이며 주주인 그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생산직과 관리직, 영업직인 임직원들은 촉진자가 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도시공간)을 만들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세일즈를 해야 한다.

넷째, 좋은 선진 사례다. "규정에 없다" "예산이 없다"며 소극적 업무를 한다든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은 잘해야 본전 뿐이란 생각이 팽배하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간다. 결정은 신중하게, 집행은 소신 있게 하는 풍토 조성은 교육의 힘이고, 최고경영자 몫이다. 책임경영을 하며 좋은 결과로 학습 효과를 공유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섯째, 경청이다.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시민활동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비판도 미래를 향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도 주주다. 긍정적 '나비효과'를 낼 수 있는 주역들이고, 4년마다 주총에서 최고경영자를 냉엄히 평가하는 자들이다.

㈜광주광역시 최고경영자가 평가받을 성적표는 '정주 환경이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후 인재와 기업이 오게 되고, 기술 혁신과 투자 집중의 선순환이 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도시의 첫걸음은 '휴가오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 어떤 조건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업인 출신 민선 군수와 공무원들이 주식회사 간판을 내걸고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공무원 사회의 고정 관념을 깨려고 했던 장성과 '삼합'정신으로 "순천하세요"를 당당히 외치며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순천. 그리고 이들을 부러워하는 지자체들.

전남·일신방직 터 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 개발, 군 공항 이전, 타 지역과 교통망 확대, 실력 광주 등등 정주 환경의 기본이 될 여러 현안에 대한 '증명' 제시가 더딘 ㈜광주광역시의 분발을 기원해 본다. 기업의 가치 상승과 좋은 배당도 기대해 본다.

기 고

공항, 통합 이전이 미래다

장 헌 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군 공항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서남권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적·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함께 이전하게 되면 지역은 어떻게 발전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지만 지금부터 내실있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첫째, 현재 광주 군 공항에는 없는 110만평 규모의 소음 완충지역을 추가로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단지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 조성 후 지자체가 관리하고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햇빛연금으로 주민들에게 돌려 주고 있는 신안군이 좋은 모델이다. 신안군 햇빛연금은 2021년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100억원을 달성했고, 5개 읍면 1만77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4년 이후에는 전체 주민의 45%가량이 수혜자가 될 예정이다.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해 2023년에는 약 2000명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총 12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광주 민간·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게 되면 무안군의 항공특화산업단지(MRO)가 활성화될 것이다. 항공특화산업단지(MRO)는 올해 준공 예정인데, 산단이 분양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이다. 기업들은 항공정비 관련 수요가 있어야만 투자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 공항의 수요만 가지고는 산단 활성화는 사실상 어렵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내 MRO 처리 규모를 2030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수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빨리 MRO 산단 일대를 민간 항공기와 함께 군 항공기, 지역의 해군, 해양경찰, 소방 헬기 등 민·관·군의 항공정비 물량까지 흡수하기 위한 집적화된 항공정비·부품수리·제조, 물류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각종 항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교육원(KAA)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KAA는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 일류 항공 인재를 양성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돕는 기관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유치하게 되면 무안국제공항 인프라 확충과 항공산업 발전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항공 관련 종사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담 병원과 휴양시설 등의 건립 또한 추진해 볼만 하다.

넷째, 무안국제공항 일대를 물류, 해양관광,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항공산업 관련 종사자와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상업·관광 산업 기능을 갖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안군의 시 승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금융·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전북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할 예정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역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일방적인 반대 정보만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듯 찬성 의견 또한 소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여론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터놓고 이야기할 것인지, 무안군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社 說

국비 확보로 청신호 켜진 현대미술관 광주관

광주 문화계의 최대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국비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일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요구한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반영했다. 다음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가 남아있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무난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지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옛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0여억 원을 들여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대미술관 분관은 서울 종로구, 과천, 청주를 비롯해 내년에 개관하는 대전까지 5곳인데 광주관은 이들 분관과 근본적인 차별화가 가능하다. 광주시가 광주관을 소장품에 대한 호남권 수장고 기능과 함께 미디어아트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미술관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14회째 개최한 비엔날레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문화적 기반이 풍부하다. 이런 문화 자원을 현대미술관 광주관에 적용할 경우 광주관이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견인하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현대미술관 광주관은 광주시가 거액을 들여 매입한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이제 국비 확보라는 첫 발을 뗀 만큼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를 비롯해 지역 문화계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광주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넓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전세사기 불안심리 파고든 악덕상혼 근절해야

지난해 빈발한 전세사기 여파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을 매매·임대하려는 지역민들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부동산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까지 겹쳤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해 4만6047건에서 올해 9월 기준 3만7797건으로 줄었고, 전남도 또한 지난해 11만218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만5312건으로 급감했다.

그런데 광주·전남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악용해 암암리에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들이 전세를 내놓은 기존 세입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찾아주겠다"는 이유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 수수료를 거래 금액의 0.4%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로 인해 기존 전셋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이사를 하려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구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도 제때에 기존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해 아예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이 없고 당사자간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당국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악덕 상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중개업자들 역시 상도(商道)를 지켜야 할 것이다. 세입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신뢰감 회복이 우선이다.

無 等 鼓

워커홀릭

정부는 최근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서만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논란으로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등 사회적 비판 여론도 컸지만, 현행 주 52시간제가 노동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낸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부가 지난 6~8월 사업주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14.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포기했지만,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제한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주 최대 69시간'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길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38개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길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긴 회원국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4개국뿐이다. OECD 국가 평균 1752시간보다는 149시간이 많다. 반면, 미국 근로자는 연평균 1791시간을 일하고, 프랑스와 독일 근로자는 각각 1490시간과 1349시간을 일한다.

이 때문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워커홀릭'(일 중독) 우려를 조명하기도 했다. 미국 NBC는 한국에서 과로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데, 그 이유로 과거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장시간 노동과 높은 교육 기대치가 악명 높은 일 중독 문화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일 중독 문화로 인해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까지 한국의 일 중독 문제를 우려하는 마당에 정부는 연장 근로 유연화 추진에 앞서 노동계 등 국민 여론을 우선 반영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